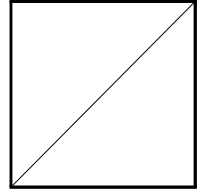


공 개



| | |
|--------------|-------------------------|
| 의안번호 | 제 39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21. 1. 27. (제 2 차) |

의
결
사
항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 |
|--------|--------------|
| 제 출 자 | 위원장 은 성 수 |
| 제출 연월일 | 2021. 1. 27. |

1. 의결주문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구속행위 금지 위반’ 등에 대하여 (주)국민은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호,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9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제1의2호,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제4호, 제69조 (과태료) 제1항 제9호
-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제1항 제6호,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제5항, 제6항 제2호, 제9항, [별표8]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4항,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1호, 제40조(신용정보 회사등의 금지사항) 제7호, 제52조(과태료) 제1항 제3호, 제2항제15호 및 제4항 제9호
- 「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1항 및 제2항, 제52조(과태료) 제1항 제3호
-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제1항 제4호,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6항,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제2항, 제43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항,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항, 제51조(과태료) 제1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3]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제27조(전산원장 통제),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28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1.19.) 심의필
-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2021.1.6.) 심의필

<별지>

(주)국민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국민은행 : 과태료 11억 72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① 추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6억3,000만원)
- ② 구속행위 금지 위반(120만원)
-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3억2,400만원)
- ④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1억2,000만원)
- 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1,200만원)
- 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2,000만원)
- 법적근거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제449조 제1항 제2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의2호, 제390조, [별표22]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제69조 제1항 제9호
(舊)「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4 제1호 제6호, 제31조, [별표4]
(舊)「은행업감독규정」제88조 제5항, 제6항 제2호, 제9항, [별표8]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4항, 제31조, 제33조 제1호, 제40조 제7호,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5호 및 제4항 제9호
「신용정보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52조 제1항 제3호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제34조의3, 제38조, [별표4]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38조, [별표4]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제28조 제2항, 제43조 제2항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 [별표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제40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27조, 제60조

2. 조치사유

가. 추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와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도
- AAAAAA지점 등 19개 영업점에서는 2018.3.5.~2019.3.27.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24명과 추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28건(판매금액 : 약 19억원 및 미화 58만달러)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주)국민은행(BBBBBBBBBB지점)은 2017.4.21. 중소기업인 차주 CCCCCCCCCC CCCCCC에 대한 한도대출(2.7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2017.3.27. 동 은행(DDDD지점)에서 해당 차주에게 저축성 보험(월납보험료 5백만원)이 판매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신용정보법」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EEEEEEEE지점 등 903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4,278명)에 대해 고객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본점 등 269개 영업점에서 2017.9월~2019.5월 기간 중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4,278명, 11,377건)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여부 입력의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 하고 영업점 직원의 입력오류 가능성에 대해 점검·시정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1)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체결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동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주)국민은행(FFFFFFFF부)은 2019.3.26. GGGGGGGGG(주)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의무 위반

- (舊)「신용정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주)국민은행(HHH부)은 2017.3.27. (주)◇◇과 IT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 (주)국민은행(FFFFFF부)은 2019.3.26. GGGGGGGGG(주)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마.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주)국민은행은 2017.4월~2019.4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배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 ①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9.7.24.)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배당 성과지표인 총주주수익률(TSR)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와 이 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해당

$$\text{② 총주주수익률 (TSR)} = \frac{\text{계약기간 중 주가수익} + \text{계약기간 중 배당수익}}{\text{계약시작시점 공정시가}}$$

$$\text{상대적 총주주수익률 (Relative TSR)} = \frac{1 + \text{케이비지주 TSR}}{1 + \text{경쟁사(신한·하나지주) TSR 평균}} \times 100$$

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전산원장 변경 통제·관리 등 위반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 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 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 (주)국민은행은 영업점 등의 데이터 수정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업무처리시스템(LLLLLL) 내 전산원장 변경이 가능한 화면(MMMM MMMM)을 구현하여,

2017.9.16.~2019.6.28. 기간 중 전산원장 등 중요데이터 변경이 금지된 외부주문 직원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은행 직원 2명, 외부주문 직원 2명)이 동 화면을 이용하여 총 122회에 걸쳐 전산원장을 수정·삭제 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이 자동기록 및 보존되지 않았고,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전산원장 변경을 위한 변경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계 법규

□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은행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2.~3. (생략)

4. 그 밖에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생략)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11. (생략)

②~③ (생략)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생략)

6. 삭제 <2017. 4. 18.>

7.~8.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舊) 「은행법」 (2018.11.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생략)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11. (생략)

④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생략)

6.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7.~8.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4826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제1항·제2항, 제52조의2제1항제3호,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② 제69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7. ~ 9.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 11. 15.]

[제2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5는 제24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1.>]

□ (舊) 「은행법 시행령」 (2017.4.18. 대통령령 제28382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머.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2항제6호 | 250 |
| 저. 은행이 법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9조 제1항제9호 | 2,500 |

□ (舊) 「은행법 시행령」 (2018.5.29. 대통령령 제28927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부칙 <대통령령 제28382호, 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 ① 영 제2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여신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원화대출
2. 원화 지급보증 중 융자담보용 지급보증, 사채발행 지급보증, 상업어음 보증, 무역어음 인수
3. 특정기업에 대한 여신에 갈음하는 유가증권 매입 중 사모사채 인수, 보증어음 매입
4. 외화대출

② ~ ④ (생략)

⑤ 영 제24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 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⑥ 영 제24조의5 제1항 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해당 차주에 대한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생략)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판매하는 행위

가.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나.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 제1호 바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

라.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⑦ ~ ⑧ (생략)

⑨ 감독원장은 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영 제24조의5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 제2항 및 <별표 3>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을 따라야 한다.

□ (舊) 「은행업감독규정」 (2017.4.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9항 관련)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영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건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에 부과하는 경우 : 영 <별표 4> 제2호 저목의 금액

2) 임원등 또는 직원에 부과하는 경우 : 영 <별표 4> 제2호 처목의 금액

나. 구속행위의 동기 및 결과,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대상건별 예정금액을 산정하되,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수취한 다음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 제24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8조제7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차주 또는 차주의 관계인에게 은행상품을 판매한 시점부터 은행이 수취한 총 금액

2) 영 제24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차주의 은행상품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총 금액

3) 제88조 제7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이 제한된 총 금액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결과,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대상상품 동기 결과 |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 | |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은행취급상품 | |
|--|---------------------------|--------------|----------------------------------|----------------|
| | 고의 | 과실 | 고의 | 과실 |
|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기준금액의 100% | 기준금액의 50% | 기준금액의 100% | 기준금액의 50% |
|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 | | 기준금액의 50% | 기준금액의 25% |
|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 기준금액의 50% | 기준금액의 25% | 기준금액의 25% | 기준금액의 12.5% |
| 부과대상건 관련 환산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 | 기준금액의 20% | 기준금액의 10% | 기준금액의 10% | 기준금액의 5% |

3.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에 따른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소기업은 제외한다)이 차주인 여신거래와 관련 영 제24조의4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예정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면제 및 기타사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에 따른다.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017.4.25.)

[별표 8]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9항 관련)

1. 과태료 산정방식

가. 영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대상건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은행에 부과하는 경우 : 영 <별표 4> 제2호 저목의 금액
- 2) 임원등 또는 직원에 부과하는 경우 : 영 <별표 4> 제2호 처목의 금액

나.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금액을 여신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대상건별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 1) 영 제24조의5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88조 제7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제88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월수입금액
- 2) 영 제24조의5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 차주의 은행상품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총 금액
- 3) 제88조 제7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 실질적으로 차주의 자금사용이 제한된 총 금액

다.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2.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건에 대하여 구속행위의 동기 및 구속비율, 대상상품을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구속비율 | 대상상품* 동기 |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 | | 제88조제6항제2호에 규정되지 않은 은행취급상품 | |
|------------------------|------------------------|---------------------------|--------------|-------------------------------|----------------|
| | | 고의 | 과실 | 고의 | 과실 |
|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 기준금액의 100% | 기준금액의 50% | 기준금액의 100% | 기준금액의 50% |
|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 | | | 기준금액의 50% | 기준금액의 25% |
|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미만 | 100분의 2 미만 | 기준금액의 50% | 기준금액의 25% | 기준금액의 25% | 기준금액의 12.5% |
| 100분의 2 미만 | | 기준금액의 20% | 기준금액의 10% | 기준금액의 10% | 기준금액의 5% |

* 제88조 제6항 제2호에 규정된 은행취급상품과 그 밖의 은행취급상품을 모두 판매한 경우 각 구분에 따라 산정된 예정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부과대상건의 과태료 예정금액으로 한다.

3. 최종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을 감면하거나 예정금액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에 따른 가중사유 또는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주채무계열에

소속된 소기업은 제외한다)이 차주인 여신거래와 관련 영 제24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한 경우 예정금액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면제 및 기타사항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별표 3>에 따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그 일반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반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2. ~ 6. (생략)
- ② ~ ③ (생략)

제286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라. (생략)

4. ~ 11. (생략)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①~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기관주의

7. (생략)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면직

2. 6개월 이내의 정직

3. 감봉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 29.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8. (생략)

29. 제71조(제7호에 한한다), 제85조(제8호에 한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 ~ 49. (생략)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제43조 제2항 제4호, 제420조 제1항 제6호·제3항 및 제422조 제1항·제2항 관련)

1. ~ 78. (생략)

79. 제7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0. ~ 124. (생략)

125. 제10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6. ~ 312.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생략)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2. (생략)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 제3항 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 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 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3. ~ 14. (생략)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8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생략)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와 신탁계약(신탁재산을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2. ~ 10. (생략)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
|---|-----------------|--------------------|
| | | 과태료 금액 |
| 터. 법 제71조(제7호에 한정한다), 제85조(제8호에 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0호에 한정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에 한정한다) 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49조 제1항제29호 | 5,000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협회규정)

제1-3조(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투자권유자문인력(이하 "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이하 "펀드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라 한다)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나. (생략)
 - 다.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이하 "파생상품투자상담사"라 하며 영문으로는 "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라 한다)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 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 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검사 등) ①~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 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 제7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 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 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18.], [시행일 : 2017.10.19.]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법률 제16957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 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⑤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4. (생략)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생략)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2. (생략)
- 3. 제19조를 위반한 자
- 4.~8. (생략)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4. (생략)
- 15. 제40조 제7호를 위반한 자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8. (생략)
- 9. 제31조를 위반한 자
- 10. ~ 12. (생략)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7.11.28. 법률 제15146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부칙 <법률 제14823호, 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퇴임한 임원 등에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 3. 신용정보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舊)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대통령령 제 30893호로 개정되기 前의 것)

제27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생 략)

②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3. (생 략)

4. 법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5.~7. (생 략)

제34조의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법 제40조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나 방식을 말한다.

1. 전화

2.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8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파.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3호 | 4,000 |
| 하. 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1항제3호 | 4,000 |
| 퍼.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4항제9호 | 800 |
| 쿠. 법 제40조 제7호를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15호 | 2,400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마련해야 할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 기준

II.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5.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 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 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개인신용정보취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시 승인신청자에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III. 관리적 보안대책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폐기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 회사와 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 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제21조 관련)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 나.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다.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2.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간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이 법 등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 또는 서류 등의 보관에 관한 사항
- 라.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조회용도에 맞는 조회사유코드를 적절하게 입력하는 것에 관한 사항
- 마. 신용정보 보호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1의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 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가. 재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기간 및 재위탁하는 신용정보의 내용
- 나. 재수탁자 및 재수탁자의 임직원의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 라. 목적 달성 후 파기, 반납에 관한 사항 및 파기확인서 등 그 결과를 원수탁자에게 통보하는 사항
- 마. 원수탁자가 재수탁자를 관리·감독하는 사항(실태점검을 위하여 재수탁자의 업무공간에 출입하여 점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⑤ (생략)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생략)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④ (생략)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1.~4. (생략)

5. 주의

③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다목 및 마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의 직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그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2. (생략)

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 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5조 제6항(제2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모. 법 제25조제6항(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 제2항제6호 | 3,000 |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①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9조(감독 및 검사) ①~⑤ (생략)

⑥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4.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전자금융보조업자가 다른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생략)
- ② ~③ (생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바.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5,000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 부터 제3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2.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
3.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4. 그 밖에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전산원장 통제)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변경 대상 및 방법,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⑤ (생략)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주문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 금지

3.~14. (생략)

②~⑤ (생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 위반결과 \ 동기 | 상 | 중 | 하 |
|-----------|--------------|-------------|-------------|
| 중 대 | 법정최고금액의 100% | 법정최고금액의 80% | 법정최고금액의 60% |
| 보 통 | 법정최고금액의 80% | 법정최고금액의 60% | 법정최고금액의 40% |
| 경 미 | 법정최고금액의 60% | 법정최고금액의 40% | 법정최고금액의 20% |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 (1) 삭 제
-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8) 삭 제
-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
-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부칙 <제2017-38호,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국민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2.

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 제재내용 |
|------|---|
|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11억 720만원 부과 |
|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통보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 2명 주의 2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6건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추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과정 녹취의무 위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08조 제9호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와 과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해야 하는데도

- ■■■■■지점 등 19개 영업점에서는 2018.3.5.~2019.3.27. 기간 중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24명과 추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 28건(판매금액 : 약 19억원 및 미화 58만달러)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108조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68조, 제109조

2. 구속행위 금지 위반

□ 「은행법」 제52조의2 등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자)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보험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은 2017.4.21. 중소기업인 차주 ▲▲▲▲▲▲▲▲▲▲▲▲에 대한 한도대출(2.7억원)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2017.3.27. ○○○ 지점에서 해당 차주에게 저축성 보험(월납보험료 5백만원)이 판매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 여신실행일 전 1월 이내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2. (舊)「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3. (舊)「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5항, 제6항 제2호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 (舊)「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3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903개 영업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아니한 고객(4,278명)에 대해 고객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본점 등 269개 영업점에서 2017.9월~2019.5월 기간 중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4,278명, 11,377건)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 「신용정보법」 제19조 및 (舊)「신용정보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 여부 입력의 전산화를 도입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을 소홀히 하고 영업점 직원의 입력오류 가능성에 대해 점검·시정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여 고객동의가 없었음에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가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신용정보법」 제20조, 제33조, 제40조
2. 「신용정보법」 제19조
3.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4.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5.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4.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1)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체결의무 위반

- ☐ 「신용정보법」 제19조 제2항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
회사와 서로 동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부)은 2019.3.26. ○○○○○(주)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를 제공
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
(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의무 위반

- ☐ (舊)「신용정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17.3.27. (주)☆☆과 IT도급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았으며,
- □□□□부는 2019.3.26. △△△△△(주) 등 6개 업체와 각각 제휴 CD/ATM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였음에도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舊)「신용정보법」 제31조
2. 「신용정보법」 제19조
3. (舊)「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7조
4.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1조

5.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함)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은행은 2017.4월~2019.4월 기간 중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해당 성과지표인 상대적 총주주수익률(TSR)을 장기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기준에 총 배점의 30%로 포함하여 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1. 투자권유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 제71조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지점 등 3개 영업점은 2017.12.19. ~ 2018.6.5. 기간 중 펀드 투자권유자문 인력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4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8명의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투자권유하고 판매(18건, 판매금액 3,035,000원)하였으며
 - ●●●●●●●●●●센터 및 ○○○○○○○○○○센터는 각각 2017.5.31. 및 2018.3.14. ☆☆☆☆☆(주) 및 (주)△△△△ 2개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 인력이 아닌 2명의 직원이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7건, 6백만달러)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71조

(2)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불철저 등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등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등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동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투자자가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센터 등 63개 영업점 및 ▽▽▽▽▽▽부는 2017.1.2.~2018.12.31. 기간 중 ☆☆☆☆☆☆(주) 등 일반투자자 85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등) 거래를 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였으며(1,106건, 12억 1,643만달러),

이중 ☼☼☼☼☼☼☼☼센터 등 50개 영업점은 2017.1.2.~2018.12.31. 기간 중 (주)◆◆◆◆◆◆ 등 일반투자자 66개 기업에 대한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고 증빙서류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5조, 제166조의2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2

< 의안 소관 부서명 >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
| 소관부서 | 은행과 금융정책과 자산운용과 금융데이터정책과 전자금융과 | 일반은행검사국 IT·핀테크전략국 |
| 연 락 처 | 02-2100-2676 02-2100-2833 02-2100-2663 02-2100-2697 02-2100-2975 | 02-3145-7062 02-3145-7429 |